

“딸 의혹 수사로 밝혀질 것”...사과와 함께 ‘정면돌파’ 의지

조국 법무장관 후보 기자간담회

대학원 입학·장학금 수혜 몰라
흙수저 청년들에 사과·반성
자신 관련 의혹 억울함 호소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눈여겨 볼 점은 그가 ‘딸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또 그동안 제기된 술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것으로 우려되자 스스로 기자간담회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는 점도 관심사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남기자 2명이 밤 10시에 혼자 사는 딸이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렸다”며 기자간담회 도중 눈시울을 붉히는 등 ‘감정’에도 호소했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을 유발한 ‘딸 입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딸의 대학 및 대학원 입학이나 장학금 수혜 등이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한 점에 대해선 적절한 사과와 함께 “미처 알지 못했다”며 자세를 낮췄다. 반면, 아버지로서 딸의 학사 문제에 관여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도 덧붙였다. 딸

의 ‘특혜 관여 의혹’에 대한 반박 자료나 의혹을 털어낼 증거는 새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및 부산대의 학전전문대학원(의전원) 장학금 수령 의혹 등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자녀의 교육 문제에 민감한 국민정서를 고려해 적절한 사과와 철저한 조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딸이 2주간의 인턴십 뒤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오른 일과 관련해서는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모 교수님께 제 가족 누구도 연락드린 바가 없다”며 “해당 인턴십은 제 가족이 아닌 아이가 다닌 고등학교 선생님이 설계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중 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서도 “어떤 가족이든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전화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단국대 장 교수의 아들과 ‘인턴 품앗이’를 했다는 의혹에도 “단국대 장 교수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을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입시 관련 특혜 의혹 등은 일축하면서도 도덕적 미흡함은 인정하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이른바 ‘흙수저’ 청년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도 여러 차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기자회견이 열린 2일, 회견 현장에 기자들이 운집해있다.

/연합뉴스

표명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종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딸이 선정 기준이 불분명한 장학금 802만원을 수령한 경위나, 반납이 불가능했던 사유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통신기록 분석 등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조 후보자가 기자회견 형식으로 그간 불거진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딸 관련 의혹 사항 역시 사실관계 규명이라는 ‘공’은 검찰에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릴레이 의혹’과 관련된 어울함도 털어냈다. 그는 “허위 사실이 아주 많다”며 “저희 딸 아이가 포르세를 타고 다닌다고 한다. 어떻

게 하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또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저희 딸과 관련이 돼 있을 때는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남성 기자들이 밤에 딸 아이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한다”며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조 후보자는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말한 뒤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으며, 눈을 감고 7초 동안 침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과 관련,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조국 청문회’ 무산 책임 공방 격화

민주 “일정 조정 시간끌기...불가”
한국 “증인 양보...법대로 청문회”
靑, 임명 강행 수순 밝기 돌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법적 시한인 2일 무산되고 청와대가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다.

여야가 ‘가족증인’ 채택과 청문일정 연기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날 가족증인 철회 카드를 꺼내며 청문회 일정 조정을 시도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시간끌기’ 전략으로 보고 일정 재연기 불가 입장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의 가족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 일정이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한 공세를 벌였다. 한국의 가족증인 요

구에 패륜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날부터라도 당장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에서 가족증인 채택 및 일정 연기 불가론을 반복한 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합의대로 오늘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가족증인을 양보하되 청문회는 5일 이후에 개최하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제안을 청문회 무산시 을 수 있는 비난을 회피하는 동시에 청문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전격적으로 가족증인 카드를 양보하고 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시도하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담회에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자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겠다. 가족증인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면서 “오늘 청문회에 대해 의결하면 오늘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제안은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상 청문회 5일 전에 이를 의결해야 하는 만큼 이를 연결고리로 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에 앞서 나온 것으로 재송부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청문회 무산에 따른 책임을 여당에 넘기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도 “조국 몰타기”라고 비판하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도 재언급하면서 여권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도 청문회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가 가족을 증인명단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면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

통령이 3일 현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의 제출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제출부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제출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귀국일인 6일까지 제출 시한을 준 다음,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임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다만 4일 혹은 5일로 재송부 요청 시한을 정하고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국, 사상 초유 ‘국민 검증 간담회’...정당성 논란 예상

대국민 직접 소명 ‘승부수’
일각선 ‘반쪽 회견’ 지적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사상 초유의 ‘대국민 직접 소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 후보자는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하나하나 소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자회견이 국회 인사청문회처럼 증인 채택이나 자료 확보 권한이 없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반쪽짜리 검증’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논란 소지를 남겼다.

◇의혹 꼬리물기·검찰수사 착수에 ‘직접 답하겠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그간 자신과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회를 열었다. 그는 여야의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 무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기회가 없어졌다”며 “오늘 중이라

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협의 없이 결정됐지만...靑 임명수순 이어질 듯=조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두고 최대한 해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기자회견의 형식도, 시간도 제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청문회가 무산된 자리를 기자회견을 사실상 대체하는 형식을 두고 법적, 정치적 정당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담회와 관련해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조 후보자 기자회견담회 개최 10여분을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특권과 반칙의 인생으로도 모자라 감히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場)으로 전락시켰다. 주권자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371280

462810973

576214302

691749802

878114002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